

제4회 한국-대만 인문교류(경제·문화)대회
2017.9.19(화) 국립대만대학교 사회과학원

<평론>

제1 세션: 한국-대만 간 번영지교(繁榮之交)를 위한 지혜와 협력방안 - "경쟁자이면서 협력자인 한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에 관해"

송경진(宋璟眞) 세계경제연구원장

‘한국-대만 간 번영지교를 위한 지혜와 협력방안’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최병화 박사와 두차오샤 박사께서 한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협력 부문과 방안에 대해 잘 정리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덧붙여 저는 먼저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에 대해 짚어보고, 둘째,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그리고 셋째, 더욱 다양한 양측의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

가.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여파 지속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는 아직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Great Recession, 대침체)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이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세계경제의 성장률과 무역 증가율은 각각 5.6%와 8.1%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IMF)는 2017년 세계경제와 무역의 성장률을 각각 3.5%와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증가율은 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은

미약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경제가 장기저성장(secular stagnation)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홍색공급망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등 기존 글로벌 무역질서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수출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신상태(新常态)' 시대의 중국은 자기 완결형 가치사슬인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한국과 대만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가. 한국과 대만의 양자무역 관계

한국과 대만은 각각 세계 제 12위와 22위 규모의 중소개방경제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및 무역 환경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68%)과 대만(55%)에게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한국의 경우 세계 무역이 1% 증가할 때 성장률에 0.52%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은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변수입니다.

양측은 서로의 제5대 교역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의 대대만 수출액은 86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33.3%, 수입액은 104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해 양국의 무역 관계는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모방해 빠른 성장을 구가한 한국과 대만은 산업 및 무역 구조가 유사해 상호 경쟁 및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동일한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한 중국의 추격 속도가 워낙 빨라서 생산품의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만에게는 수출품의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나. 중국 무역 환경의 변화

한국 수출의 25%, 대만 수출의 40%가 대중국 수출일 만큼 중국은 한국과 대만의 최대 교역파트너입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의 무역은 한국과 대만이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들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활용해

생산한 완제품을 미국과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홍색공급망 확대에 의해 한국과 대만의 주요 수출품의 중국 자체 생산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한국과 대만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양측은 중국의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중국발 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시장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과 시장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 기준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5.7%로 미국 55.4%, 중국 67.8%, 일본 69.8%보다 강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대 수출품목 구성을 보면 2008년 이후 사무용 기계·자동차료 처리장치가 10대 수출품목에서 제외되고 산업용 일반기계·장비가 신규로 진입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2016). 반도체, 평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 등 일부 품목이 2017년 상반기 한국의 수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만의 주력 수출품이기도 한 이들 품목은 글로벌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큰 가격변동성을 보이는 상품들입니다. 올해 이들 상품의 수출 증대는 글로벌 시장의 추세적 증가라기보다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첨단 IT 관련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 감소를 대비해 상품의 질과 경쟁력 제고에 양측이 함께 노력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라. 서비스 상품 무역의 강화

또한 상품 무역이 강세인 양측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D)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양측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하고 동시에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인 동시에 협력자가 되는 셈입니다. 가령 양측이 관심이 높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 기계, 5G 통신망 등에서 양자 협력뿐 아니라 유수의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상용화한다는 구상 아래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G 통신망은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전자 등 IT 산업이 강한 한국과 대만의 수직적 분업뿐 아니라 수평적 분업을 통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대만의 7대 신산업정책과 한국 신정부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습니다.

마. 수출시장의 다변화

주요 수출시장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드 여파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아세안(ASEAN), 남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최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된 축복(blessing in disguis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쟁국들에 비해 세계 무역 환경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진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대만이 동남아, 남아시아 지역 18개국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남향정책(New Southbound Policy)’의 방향과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실물경제 차원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통상정책 협력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 및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올 초 한국 정부는 기존에 ‘원산지 관리’에 집중되어 있던 FTA 활용을 ‘시장 진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통상정책 경험은 대만의 수출 영토 확대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 정부가 이미 밝힌 것처럼 대만의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의 참여는 무역 영토 확장뿐 아니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TPP는 미국의 탈퇴로 사실상 담보 상태에 있지만 TPP-11의 움직임도 있고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과 대만은 TPP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3개국이 참여한 소위 서비스자유무역협정이라고도 일컫는 ‘다자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은 서비스산업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협정으로 한국과 대만 양측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양측이 적극 지지하고 공조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APEC 등 다자 채널에서 한국과 대만이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G20에서 아시아의 비G20 경제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의 입장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

무역 영토 확장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에 관한 협력뿐 아니라 비슷한 산업·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습니다.

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공동 대응

우선 한국과 대만 양측은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2016년 기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대만 역시 1.13명으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CIA World Factbook 2017).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대만도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에 육박하고 있어 조만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인구구조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양측 간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조만간 출범될 예정입니다. 대만에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 간 구체적이고 긴밀한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나. 기초연구와 혁신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노동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이 높아져야 합니다. 생산성은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증가 그리고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혁신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 양측은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양측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비(한국 2015년 4.23%, 대만 2014년 5.6%)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의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냈다 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하는 특허체제(patent regime)의 취약성 때문에 혁신으로 발생하는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2015-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보고서는 혁신 및 비즈니스 성숙도 부문에서 대만 16위, 한국 22위 그리고 중국 25위라는 순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 양측은 기초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에 공동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빠르고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혁신 도출에 함께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민간 차원의 인적·문화예술 교류 제도화 및 다양화

이미 한국과 대만은 대만인과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양측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경제·무역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1.5 트랙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제도화 및 다양화하고 대중문화·예술 교류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